

대전·충청권 공조 네트워크 강화해야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새 정부가 들어선지 이제 6개월, 대전·충청권내 각종 지역현안사업이 폐지, 축소 및 왜곡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복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구와 정원 축소, 행복도시추진위원회의 개편 및 도시건설 예산 삭감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대덕연구개발특구사업의 경우에도 예산 삭감이 우려되고 있으며, 국방대학교의 논산 이전은 구체적 진전 없이 재검토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역현안사업의 폐기와 축소 추세가 계속되면 대전·충청권 전체에는 치명적인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 이 같은 우려는 대선공약사업인 대전근현대사박물관 건립 사업 무산을 시작으로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또 다른 대선공약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유치도 자신하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단순한 투자 사업이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 대덕 테크노밸리,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오창 과학산업단지 조성 사업 및 천안·아산 크리스탈밸리 등 대전·충청권내 대규모 거점개발사업을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가 높은 초 광역적인 첨단기술 산업벨트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들이다. 이들 사업은 대전·충청권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치 성공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도 더욱 크다.

그러나 현재의 불리한 정책여건과 치열한 지역 간 경쟁을 고려할 때 충청권 각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이들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대전·충청권 3개 시·도가 힘을 모아 공동대응에 나서는 일이다.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국책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이 만족할만한 공조 방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대전·충청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협력과 상생문화, 그리고 전통을 지니고 있어 공조의 가능성은 높다.

대전·충청권은 그동안 3개 시·도간 행정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협력과 활동을 전개해 왔다. 2000년 “충청권공동발전계획” 수립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이끌어냈고, 특히 민선4기 출범 이후에는 “충청권 경제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 협력의 공조체계까지 갖추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현안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조 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전·충청권 공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기존의 지역협력과 상생활동을 보다 체계적, 조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수단을 갖추는 데 치중해야 한다.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역량 구축 없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역협력과 상생활동을 추진하기 어렵다. 둘째, 지방행정기관 주도의 공조를 지역 학계, 언론, 시민단체 및 산업, 경제계 등 민간부문으로 확대토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여론이 뒷받침될 때 충청권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행정구역을 기초로 한 제한된 협력에서 벗어나 행정구역을 초월한 전방위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협력과 상생의 노력만으로는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의 공동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지역상생과 협력문화의 정착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협력과 상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작은 이익에 집착하다 보면 보다 큰 미래와 발전 기회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대전·충청권 주민을 위한 진정한 공조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다.

*중도일보 9월 1일자 35면 게재된 원고 수정·보완함